

News

은행권 중금리 대출 이자 상한 6.5%→6.79%로 조정

KBS

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상향 조정 발표… 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하반기 6.79%로 상향 작년 말 대비 올해 5월 기준 조달금리 변동 폭을 업권별로 반영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1조 5천억원

'개점 휴업' 新잔액 주담대…與 압박에 은행권 판매 재개 검토

뉴스1

농협, 우리 등 은행권,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주담대 판매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들어가… 여당의 고금리 장기화 대책 요구에 따른 것 현재 다수 은행들은 해당 상품 판매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 현재 KB국민만 판매 중… 다만 변동금리 대출로의 쓸림 현상 심화 가능성

씨티 8조 신용대출 파이싸움… 편의성 KB·토뱅 vs 우대금리 하나·우리

머니S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대환대출을 통해 은행 곳곳으로 분산… 고객 끌어모으기 경쟁에 불붙어…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았던 고객들은 KB, 하나, 우리, 토스뱅크에서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대출 가능… 신한, 대환대출 상품 출시 준비중… 8조원 규모 파이싸움

통신사 인증은 가라… 국민·신한·하나·카뱅 본인확인 기관 통과

머니S

국민, 카카오뱅크, 신한, 하나 4개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통신 3사가 사실상 복점해왔던 본인 확인 시장에 은행들 진입 최근 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 활성화되며 기관 지정 신청 증가 중… 온라인 금융 거래나 개인정보 기입 시 통신사가 아닌 은행에서 본인인증 가능

금감원, 보험사에 "국고채 금리 '6.5% 상승 시나리오 제출하라"

헤럴드경제

금융감독원, RBC비율 떨어진 일부 보험사에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6.5%까지 오를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 제출 요구…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주문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국고채 금리 4% 상승시 RBC 100%가 위태해질 수 있어… 금리가 5%까지 가면 LAT 반영해도 상위 보험사 2-3개 빼고 대부분 100% 미만 가능성

물가 치솟는데…3세대 실손보험료까지 오르나

뉴스1

보험사들,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조율해 조만간 금융당국에 의견 전달 예정… 최대 1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작년말기준 107.5%로 급상승한 손해율이 원인… 이번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

이복현 '유동성' 경고에…증권사 "1개월 단기채 없애라"

머니투데이

금감원, 다음주까지 증권사별 유동성 대책 점검하고 채권 관련 리스크 집중 파악 예정… 1개월짜리 전자단기사채를 최소 3개월이상짜리로 당장 전환하라는 주문 내부적으로 아직 위기상황이라 판단하지는 않지만 ELS 마진콜 사태가 국내 자본시장에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 점검에 촉각 세우는 중

불황 속 주목받는 '부동산 조각투자'…인플레 방어 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통 자산 급락에 따른 우려 잇따르자 안전한 투자처 찾는 투자자들 급증… 부동산 조각투자가 대안 상품으로 여겨져… 관련 플랫폼들 발빠르게 청약 일정 내놓아… 증권사들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와 손 잡고 있어… 미래에셋, 이달 카사와 업무협약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